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이 표류하고 있다. 문 정부는 취임 후 13대 혁신 성장동력을 설정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지만, 정작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갈등이다.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 논의를 둘러싸고, 각계는 대립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설립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풀 하나 못 풀면서 혁신성장? 한국은 '모빌리티 후진국'

정책 수준 '리트머스 시험지' 주목
국토부 "운수사업자로 인정 안 해"
모빌리티 사업, 규제 아닌 육성 필요

모빌리티 혁명은 혁신 성장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통신 등 산업계를 아우르는 분야로, 4차산업 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 수준을 가능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사실상 후진국으로 돌입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운송사업자, 사용자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간 다툼이 격해지면서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택시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 제도 허점에 갈등 깊어져

택시 4개 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한 택시 기사 고(故) 최우기 씨 추모식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다. 다음 주에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분신을 해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남긴 유서에는 정부가 법에 의거해 카풀 사업을 처벌하고 택시 사업을 지켜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카풀 영업 시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해부터 전북 전주에서 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출퇴근 시간으로 명시돼 있다. 카카오카풀은 시간대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운전자가 하루 2회에 한해서만 운행을 할 수 있게 했다.

택시 4개 단체는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단 카카오 카풀은 불법이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문제를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마다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만큼 시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카풀 운전자를 사업자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방침도 있어서, 카풀이 택

시 사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카카오는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카풀은 우버 등 공유차 사업과는 다르다. 앞으로도 카풀은 운수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전쟁 연기, 합의 찾을까

다행히 카카오-택시 간 전면전은 연기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13일 카카오카풀 정식 서비스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택시 사납급제 폐지 및 월급제 시행을 담은 '여객자동차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갈등 봉합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도 민주당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택시지부는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해 9월 4일부터 전북 전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삼학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택시 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 노동자 근무 조건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다"며 "최우기 씨도 유서에 택시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법안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택시 4개 단체는 월급제가 개인택시 사업자 생존권을 보장하지는 못할것이라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 등은 개인택시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카카오

카풀이 문제가 됨에 따라 우선 월급제 관련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택시 업계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해왔다. 정부에 발맞춰 조만간 개인택시를 위한 법안도 빌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화 의지 커

관계자들은 모빌리티 사업 육성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택시 4개 단체가 카풀 금지를 주장하면서도, 대화 의지를 이어가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택시 단체 관계자는 "모빌리티 사업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같이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카풀 허용 시간을 택시 수요가 많은 일부 시간으로 규정하면 된다.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택시지부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육성해야 하는 사업임에 공감했다. 다만, 대기업 자본이 운수 사업을 점유했을 때 병폐를 우려하며 정부가 사업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택시 업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50여차례에 걸쳐 택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택시 업계와 꾸준히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카풀을 완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택시 사업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카카오모빌리티

카풀서비스 출시 연기

카카오모빌리티가 17일로 예정했던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풀 서비스 사업에 대해 택시 업계,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택시 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고민 끝에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간 카풀을 두고 카카오는 '사회 발전을 위한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반면, 택시 업계는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라는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본격적인 갈등은 지난 10월 시작됐다.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자 서울 개인·법인택시 조합은 24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 후 정부, 국회, 택시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7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자 택시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급기야 지난 11일 카풀에 반대하던 택시 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앞으로도 계속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정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일자리 10만개 양성

식어가는 제조업, 2.3조 '스마트' 투자로 되살아날까

중소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

스마트 산업단지 10곳으로 늘리고
지역주도형 지원 모델로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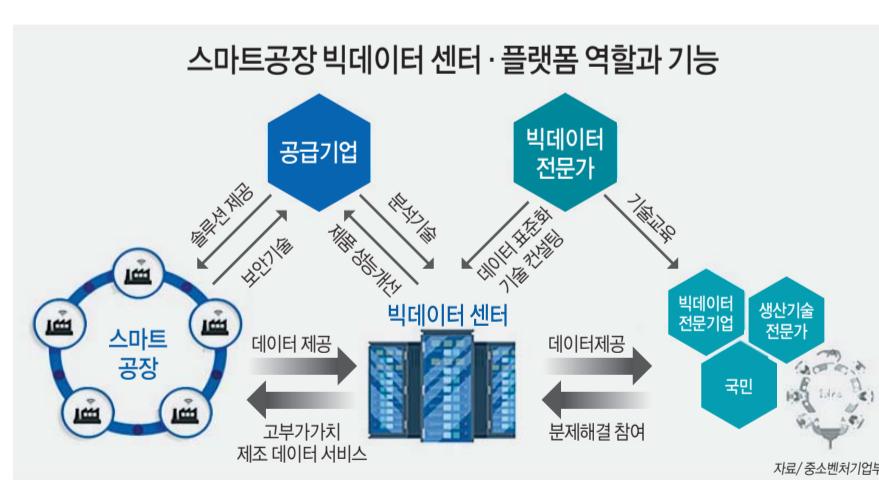
정부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지원한다. 스마트 산업단지도 내년에 2곳을 비롯해 총 10곳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와 스마트 산업단지 10개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제조 일자리를 만들어 산업재해를 30% 줄이고,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제조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돼 자동제어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이다.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면서 실시간 개별 수요자 맞춤형 생산을 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지난 3월 제시한 2만개에서 이번에 3만개로 올려잡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에는 스마트공장을 만들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가진 ICT 기술과 우수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공장을 조기 예상해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 중

인 기업과 '뿌리 산업'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 업종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억원 등 모두 2조원을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을 위해 3000억원의 전용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지역주도형 지원 모델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확대한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대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에서 퇴직한 우수 전문가를 스마트 마이스터로 지정해 중소기업에 파견하겠다"면서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의 2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 마이스터'는 중소기업에서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고, 기술지원·사후관리·노하우 등을 전수하게 된다.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내년에 제조데이터의 수집·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기부연구·개발(R&D) 예산

1조1천억원의 20%를 공급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쇼룸도 만들기로 했다.

경남과 경북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계획을 세우고, 일부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도 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6만6000개를 창출, 18조원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당 일자리가 2.2개 증가하고 1인당 평균 매출을 2억8000만원으로 계산한 셈이다. 아울러 '공장 혁신'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확산 등 '일터혁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를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데이타를 연결·공유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 번째 전국경제투어로 이날 경남 창원을 방문했다"면서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제조업 혁신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